

베트남 FDI 정책 전환의 의미와 시사점: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를 중심으로

곽성일 세계지역연구2센터장 (sikwak@kiep.go.kr, 044-414-1050)



차 례

1. 배경
2. 2026년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의 주요 내용과 함의
3. 시사점

주요 내용

- ▶ 베트남은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를 통해 현지 유입 FDI가 저부가가치 가공형 산업에 집중되고 자국 기업과의 연계 및 기술 이전이 미흡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
 -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개정 투자법·기술이전법 발효를 기점으로 기존의 무조건적인 세제 감면을 폐지하고, 실제 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R&D) 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주는 성과 연계형(Result-based) 인센티브 제도로의 전환을 본격화
 - 정책 변화는 대규모 FDI 유입에도 현지 기업으로의 기술 낙수효과가 부재했다는 베트남의 실증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는 기존의 노동·자원 집약적인 산업 부문에 대한 양적 자본유치 전략을 버리고 자국 기업 연계 및 기술 이전 성과와 연동한 자본유치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지침
 - 베트남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국산화율 45~50% 달성, MSCI 신흥시장 승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첨단 산업 위주의 통합 인프라와 인재 생태계 구축을 강조
 - 향후 FDI 기업이 베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R&D 투자 확대, 현지 합작 법인 설립 및 기술 이전 등의 적극적인 공급망 전략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정치국 결의안 제10호가 규정한 국산화율 최대 50% 달성과 로컬 기업의 공급망 편입 목표는 한국 생산 법인에 전례 없는 상생 의무를 안겨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업은 핵심 기술 유출과 부품 품질 하락의 딜레마에, 중소기업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우려에 직면
 - 다자간 국제 통상 규범 준수와 치열한 FDI 유치 경쟁 구도 때문에 베트남이 강압적인 기술 탈취국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결의안 제10호는 전체 FDI 자본의 75%를 기술·자본·경영이 우수한 선진국으로부터 유치한다고 밝히고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
 - 한국기업들은 현지 명문대와의 협력 및 조인트벤처 설립을 주도해 한국의 기술 표준을 현지 가치사슬에 이식함으로써 베트남 미래산업 부문의 신규 규제를 한국과 조화되도록 유도할 필요
 - 기술 이전 요구가 드세진다면 기술 모듈화와 아세안 지역 분산 배치 등 유연한 헤징 전략을 병행할 필요

1. 배경

■ 1986년 도이머이 선언 이후 FDI는 투자자원 공급,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공급망 참여, 선진기술 도입 및 물류와 현장 관리 역량 개선에 기여

- FDI는 베트남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GDP의 20% 이상, 총교역의 70% 이상, 산업 생산의 50% 이상을 설명¹⁾
-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FDI가 여전히 요소(노동, 자본, 에너지 등) 집약형 및 가공형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에서 형성되는 부가가치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에 주목
 - 베트남 자국 기업과의 연계 및 기술 이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 및 성 정부 간 FDI 유입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 경쟁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

■ 정치국 결의안 10호를 공표한 베트남 정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자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와 연동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 사실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의 내용 중 일부는 이미 현행 법령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음.
 - FDI에 관한 2019년 정치국 결의안 제50호,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2024년 정치국 결의안 제57호, 민간 경제부문에 관한 2025년 정치국 결의안 제68호 등도 유사한 방침을 포함
- 2025년 개정된 기술 이전법 및 투자법에서 성과 기반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개정된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5)」이 2026년 3월 발효되면서 기존의 단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고, 기술 이전 및 R&D 실적에 따라 차등 혜택을 주기로 함.²⁾
 - 개정된 「기술이전법」을 2026년 4월 발효하면서 자발적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표방³⁾
- 베트남은 2024년 최저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MT)를 도입하면서 과거 베트남이 제공하던 조세 감면 혜택은 대폭 축소
 - 축소된 조세 감면을 대체하는 유인책으로 베트남 정부는 세부 시행령의 실질 기반 공제(SBIE) 조항을 통해 기업이 현지 R&D나 인력 교육, 기술 이전에 투자한 성과를 증빙할 때만 직접 재정 환급금(현금 성 보조금)이나 인프라를 무상 지원하기로 함.⁴⁾
- 2026년 6월 공산당 정치국 결의안 제10호(Resolution No.10-NQ/TW)에 대해 포럼 서기장이 서명하면서 지난 40년간 유지해 온 FDI 유치 정책의 대전환이 본격화
 - 양적 성장을 위한 단순 자본 중심의 FDI 도입에서 벗어나 FDI의 선별적 유치 통한 질적 고도화

1) ASEAN Daily News(2026. 7. 1.), 「베트남 FDI정책 대전환... 정치국 결의 제10호의 법률적 함의」, <https://www.asea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838>.

2) Yulchon(2026), "Key Highlights of the Law on Investment 2025 (Law No. 143/2025/QH15)," <https://www.yulchon.com/en/resources/publications/newsletter-view/42751/page.do>.

3) 법치뉴스(2026), 「베트남, 기술이전법 개정 시행... "디지털·친환경 중심 산업경쟁력 강화"」,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4>.

4) EY(2025), "Vietnam publishes Decree on implementing top-up Corporate Income Tax," https://www.ey.com/en_gl/technical/tax-alerts/vietnam-publishes-decree-guiding-implementation-of-top-up-corporate-income-tax.

-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FDI 유치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베트남 자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는 기술 파급 효과(Spillover)는 거의 없다는 위기감 때문
- 응웬 차우 쩐 외(2026)는 전자산업 부문에서 FDI 유치가 현지 기업의 기술 발전과 경영 능력 향상(낙수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⁵⁾
 - 2025년 11월 베트남에서 발표된 응웬 차우 쩐 외(2026)는 FDI 기업이 가치사슬상에서 지배적일 때, 국내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저부가가치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 기회를 누린다고 주장
 - 이는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국면에서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자발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판단됨.
 - 국제 무역 규범(WTO, CPTPP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강제 지분 제한(JV 강요)'은 피하면서, 세련된 유인 구조(Result-based Incentive)로 FDI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변화를 압박

글상자 1. 응웬 차우 쩐 외(2026)의 주장

- 쩐 외(2026)는 로컬 기업의 증가하는 TFP 동학 속에서도 수평적 기술 이전은 작동하지 않고 단절되었다는 점을 메타프론티어 비율 분석과 FDI 변수를 이용한 입체적인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실증
- **[기술 격차 지속과 낙수효과의 부재]** FDI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도 베트남 현지 로컬 기업과 FDI 기업 간 기술 및 생산성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되었으며, 실질적인 기술 이전 성과도 극히 미미한 수준
 - **[글로벌 선도 기업의 원천 기술 통제]** 전자 및 첨단 기술 산업 등 생산자 주도형 산업에서 원천 기술, 설계 소스코드, 핵심 디자인 등은 해외 본사에 의해 철저히 통제(Block-boxing)되어 합작법인(JV) 의무화나 강력한 정책적 연계 기제가 없는 단순 공급망 연결을 통해서만 절대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규명
 - **[로컬 기업의 자생적 성장]** 베트남 로컬 전자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을 분석한 결과, FDI 기업의 기술 전수나 낙수효과보다는 로컬 기업이 스스로 감행한 혁신 및 자체적인 인적 자본(R&D) 투자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었다는 증거를 발견
 - **[More is Less 현상 경고]** 형식적인 FDI 유입 증가는 자국 기업이 가치사슬 상부로 고도화할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베트남은 영원히 단순 글로벌 조립 기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

자료: Nguyen Chau Trinh, Pham Thi Thu Tra, Ha Thi Cam Van, and Dao Le Trang Anh(2026), "FDI dominance and the scope for a modern domestic industry," Research Policy, Volume 55, Issue 1, <https://doi.org/10.1016/j.respol.2025.105368>.

- 로컬 기업의 절대적 기술 진보에도 로컬 기업과 FDI 기업 간 격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유지한 원인은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구조적 도약(Catch-up & Leap)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
- 로컬 후발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까다로운 제조 스펙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교체하며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지만, 이는 64.4%라는 기존의 위치를 지키는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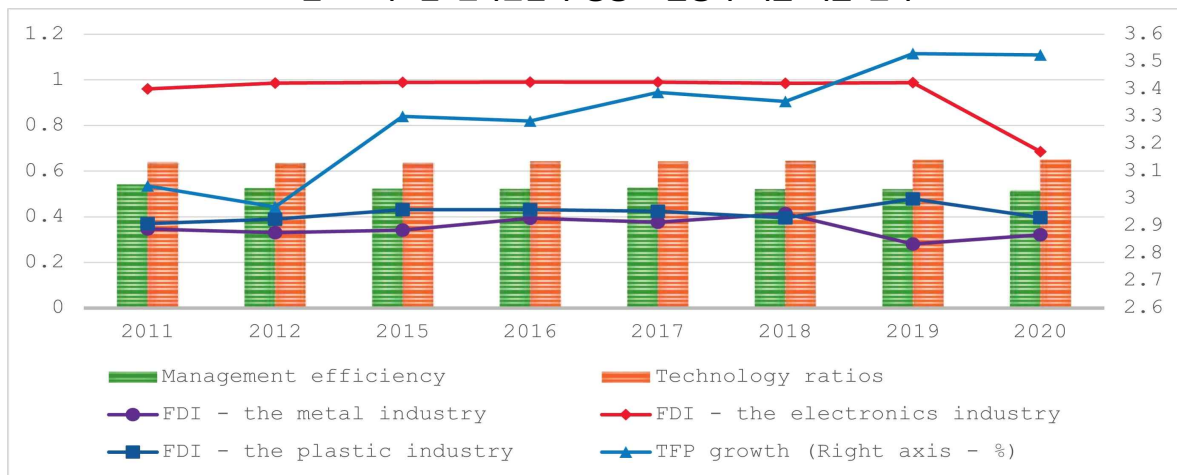
5) Nguyen Chau Trinh, Pham Thi Thu Tra, Ha Thi Cam Van, and Dao Le Trang Anh(2026), "FDI dominance and the scope for a modern domestic industry," Research Policy, Volume 55, Issue 1, <https://doi.org/10.1016/j.respol.2025.105368>.

- 로컬 기업들은 공정의 미세 업그레이드라는 추종적 기술 진보는 달성했지만, 원천 기술을 흡수해 체질을 혁신하는 구조적 도약에 실패해 상대적 기술 갭은 고착화

■ 베트남 현지 로컬 전자업체들의 평균적인 경영 효율성 수치가 장기간 약 52.2% 부근에서 정체되었다는 점은 절대적인 물리적 산출 및 관리 수준이 기술에 비례해서 나란히 증가했음을 시사(그림 1 참고)

- 기계 현대화, 부품 복잡화, 공정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규율을 재확립하고, 물류 일정 관리, 현장 관리 등 관리 역량의 절대적 개선 덕분에 효율성 프론티어의 팽창 속도를 실제 생산량 증가 속도가 정확히 쫓아갔을 것으로 켄 외(2026)는 추론
- 로컬기업들의 실질 TFP는 매년 유의미하게 성장했음에도, 다국적 선도 기업으로부터 현지 산업 생태계로 전파된 실질적인 기술 이전(Technology Spillover)은 부재
- TFP는 외생적으로 주입되는 단순한 기술 도입만을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며, 인적 자본의 내부 고도화, 자발적인 원자재 수입을 통한 내재적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 등 개별 기업 내부의 고군분투가 자아낸 '자생적 기술 효율 혁신'을 두루 결합한 다차원적 잔차 지표
- 현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학습하여 로컬 생산성 자체를 전진시킨 '내재적 자생력 성장 기여분'이 TFP의 증가를 초래

그림 1. 베트남 전자산업의 경영 효율성과 기술 비율 변화



자료: 응웬 차우 켄 외(2026), Figure 2.

■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의 도입 배경과 연결된다면 FDI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성과 연계형 우대 혜택과 특혜 조치 수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공급망 전략의 변화가 필요

- 단순 부품의 제3국 수입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현지 합작 법인(JV) 설립 확대와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경영 구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높아짐.

2. 2026년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의 주요 내용과 함의⁶⁾

■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결의안 제10호(Resolution No.10-NQ/TW)는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경제발전에만 관한 전략 지침으로 이해되며, 결의안에 드러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문제의식]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베트남의 경제구조 전환, 성장 모델 혁신, 수출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크게 기여했지만, 투자 유치 및 관리의 질적 수준은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함.
 - 베트남에 유입되는 FDI는 여전히 노동·자원·에너지 집약적인 단순 조립·가공 프로젝트 비중이 높고, 국산화율과 부가가치가 낮으며, 베트남 국내 기업과의 연계 및 기술 이전이 미흡
- [기본 정책 방향] FDI를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단순 자본유치에서 벗어나 통합 생태계 구축과 철저한 투자자 권익 보호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과 질적 성장을 도모
 - [FDI 기업의 경제적 위상 인정과 동등한 대우 보장] FDI 부문을 베트남 경제의 필수적인 축으로 삼아 장기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타 경제 부문과의 동등한 대우 및 공정한 시장경쟁을 법적으로 보장
 -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 도약과 연계] FDI 유치는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경제 효율성 제고,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참여 심화를 통해 정치·안보적 안정과 국가적 위상 제고에 기여
 - [질적 성장과 성과(KPI) 중심의 패러다임 대전환] 행정 구역 단위의 단순 양적 자본유치에서 ‘산업 클러스터, 가치사슬,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유치 방식을 바꾸고, 투입 기반 세제 혜택에서 기술 이전 및 국내 기업 연계 등 실제 ‘약속 이행’ 중심의 지원 제도로 전환
 - [조화롭고 통합된 외국인 투자 생태계 조성] 자본시장, 금융 중심지, 첨단 기술 단지, 물류 및 데이터·에너지 인프라와 국내 기업 발전 전략을 유기적으로 엮어 거대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역 본부 및 R&D·설계 센터 유치를 촉진
 - [투자자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고, 양측의 이익 조화를 위한 정기 대화 메커니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
 - [당·정의 일관된 국가적 조율과 실질적 기여도 최우선 평가] 당의 영도하에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전략과 감시 체계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지방 성·시의 창의적 주도성을 살리고 실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의 척도로 설정

■ [주요 발전 목표]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술 이전 촉진, 고숙련 인재 양성, 국내 기업과의 연계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제시
 - 결의안 제10호의 효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기반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적 자율성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제시

6) Xây dựng chính sách, pháp luật(2026. 7. 13.), “TOÀN VĂN: Nghị quyết số 10-NQ/TW của Bộ Chính trị về PHÁT TRIỂN KINH TẾ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https://xaydungchinhachsach.chinhphu.vn/ngghi-quyet-so-10-nq-tw-ve-phat-trien-kinh-te-co-von-dau-tu-nuoc-ngoai-11926061312552157.htm>(검색일: 2026. 7. 14.).

- **[2030년 목표]** 아세안 선도국으로 도약 및 산업의 체질적 기반 강화
 - [역량 확보] 비즈니스 환경, 공공서비스, FDI 유치 역량 측면에서 아세안 선도국으로 진입
 - [유치 규모] 등록 자본 2,000억~3,000억 달러 유치 및 실제 투자 1,500억~2,000억 달러 집행
 - [FDI 질적 고도화] 선진국발 첨단 FDI 비중 75% 확보, 포춘 500대 다국적 기업 투자 30% 증가, 글로벌 기술 기업 R&D·본사 최소 3개 이상 설립 유치
 - [자국 기업 연계]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 45~50% 달성, 국내 기업 1만 개 공급망 참여(1차 협력사 500~1,000개 육성)
 - [인력 및 인프라] 숙련 근로자 비중 80%로 확대, 전국 산업단지 중 친환경 산업 비율 10% 달성
 - [금융 선진화] 2030년 이전 MSCI 신흥시장(Emerging Market) 격상 달성
- **[2045년 목표]** 아시아 혁신 허브 달성 및 고소득 국가 진입
 - [아시아의 거점화]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생산·서비스·혁신 및 지역 거버넌스의 선도적 중심지로 육성
 - [자본시장 고도화]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국제 기준의 자본시장 정착
 - [경제적 기여도 극대화] 외국인 투자 부문이 전체 사회 투자의 약 25%, 국가 GDP의 약 30%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소득 선진국 진입에 기여

표 1. 2026년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의 2030년 주요 발전 목표와 함의

지표	2030년 목표	함의
투자 환경	- 아세안(ASEAN) 지역 내에서 투자 환경, 경쟁력, 혁신성, 공공서비스 품질 부문의 선두 그룹 진입 2030년 이전까지 베트남 주식시장의 MSCI 신흥시장으로 승격 추진	-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해외 자본 유치 강화 - 반도체, AI 등 첨단 미래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적 장기 금융자본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려는 의지
유치 규모 (2026~30년)	등록 자본 기준 약 2,000억~3,000억 달러(연간 400억~500억 달러), 실제 집행 자본 기준 약 1,500억~2,000억 달러(연간 300억~400억 달러) 달성 추진	FDI는 여전히 중요한 성장 동력
투자 질적 고도화	- 전체 FDI 자본의 75%를 기술·자본·경영이 우수한 선진국으로부터 유치하고, 포춘 500대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30% 증가 - 글로벌 기술 대기업 최소 3곳 이상의 본사, 사무소 또는 R&D 센터를 베트남에 유치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닌 원천 기술 연구 기능을 베트남 내에 묶어두려는 의지
제조업 국산화율 제고	- 주요 산업의 평균 국산화율을 45~50%로 상향 - 베트남 국내 기업 중 약 1만 개 사를 FDI 공급망(이 중 500~1,000개 사를 1차 벤더로 육성)에 진입	- FDI 기업들만 따로 노는 '섬' 같은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연계를 강조 - FDI 기업이 현지 부품을 쓰도록 유도하여 자국 공급망을 육성하겠다는 의지
인력 고도화 및 친환경 인프라	- 전체 고용 중 숙련 노동자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 - 에코(친환경) 산업단지 비중을 전체의 10%로 확대	-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 해소 - 녹색 전환(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빅테크 공급망 기준에 부합하려는 의지

자료: Xây dựng chính sách, pháp luật(2026. 7. 13.), "TOÀN VĂN: Nghị quyết số 10-NQ/TW của Bộ Chính trị về PHÁT TRIỂN KINH TẾ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https://xaydungchinhachsach.chinhphu.vn/ngphi-quyet-so-10-n-q-tw-ve-phat-trien-kinh-te-co-von-dau-tu-nuoc-ngoai-11926061312552157.htm>(검색일: 2026. 7. 14.).

- [달성 방안] 베트남의 FDI 정책을 양적인 유치에서 ‘성과와 연동된 유치’로 전환하고, 첨단 산업 위주의 인프라·인재·제도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과 FDI기업이 상생하는 고부가가치 경제 생태계를 구축
- [사고 및 제도적 패러다임 혁신] 투자·토지·세무·지식재산권 등의 법 체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
 - 투자금액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기술 이전, R&D 기여도, 녹색·디지털 전환 성과와 연동된 지원으로 전환하고 약속 불이행 시 혜택을 철회하는 사후 관리 도입
 - 대규모 전략 기술 프로젝트에는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하고, 국제금융센터, 자유무역지대(FTZ), 경제 특구, 하이테크 단지 등에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제도적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
 - ‘국가 투자 단일 창구 포털’ 등 투자 관리를 완전 디지털화·AI화하여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제 비용 감소
 - 디지털 및 친환경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제도로도 허용하여 디지털 전환(AI, 소프트웨어 등)이나 친환경 시설(태양광, 탄소 배출 저감 설비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을 때, 법인세를 초기에 파격적으로 줄여주어 투자금의 빠른 회수를 지원
 - 금융기관들이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적이고 순환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해 금리 보조 및 우대 대출을 제공하도록 장려
 - 지방정부가 예산을 활용해 기업 내외 교육비 및 훈련비에 대한 현금성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
- [첨단 산업 유치 및 전략적 인프라 확충] 전자, 반도체 칩, 디지털 장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블록체인, 바이오·의학, 친환경 에너지, 첨단 소재, 첨단 물류 및 금융 등을 핵심 유치 분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주요 항만·고속철도·물류센터를 연결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및 친환경·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이는 낙후 지역 간 투자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지방 간 경쟁을 축소하고 중앙에서 직접 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투자를 배분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되므로 향후 지방정부의 구두 약속보다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더 중요해질 전망
- [로컬 공급망 육성과 파급효과 극대화] 국내 공급업체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급업체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베트남 기업의 가치사슬 참여 및 기술 이전 강제 및 장려⁷⁾
 - 국내 기업이 FDI 기업과 합작,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FDI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베트남 인재들이 자국 내에서 혁신을 확산하도록 유도
 - 산학 협력을 통해 전략 기술,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야의 숙련 근로자 및 관리자 집중 육성
- [경제 관리 효율성 및 자본시장 고도화] 국가 원스톱 투자 포털을 디지털화하여 행정 처리를 간소화
 -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 부문의 투자를 엄격히 감독하고, 이전가격(탈세 행위) 조작·무역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종 실소유주 검증 강화
 - ※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거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우대 조치를 회수하겠다는 의미
 - 단기 은행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식·채권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증권시장 고도화(MSCI 신흥시장 격상 등)를 통해 장기적인 해외 간접투자(FII) 유입 촉진

7) 국가 공급업체 개발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가 직접 가능성 있는 현지 중소기업들을 선발한 뒤,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품질 표준, 경영 관리 노하우를 교육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시범 운영
- ※ 주식·채권 시장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개혁과 시장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글상자 2.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제도 개편 요약

- ① 디지털 자산의 법적 인정(2025년 6월)
 - 베트남 국회는 「디지털기술산업법(LDTI)」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이 2026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면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가상 자산(Crypto-assets)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합법적 자산으로 명시
- ② 다낭시 최초의 환전 샌드박스 승인(2025년 8월)
 - 베트남 다낭시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VND 등) 간의 초고속 직접 환전을 지원하는 최초의 핀테크 샌드박스 프로젝트인 바살 페이(Basal Pay)를 승인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실험을 시작
- ③ 5개년 시범 운영 정부 승인(2025년 9월)
 -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Resolution No. 05/2025/NQ-CP)을 통해 '5개년 가상자산 시장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음지에 있던 거대한 외환·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
- ④ 정식 거래소 샌드박스 출범(2026년 6월)
 - 2026년 6월 베트남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가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공식 시범 출시를 강력히 지시
 - 베트남 재무부(MoF)는 신청서를 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중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한 5개 국내 기관을 시범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거래소 운영을 시작

자료: 언론 보도 종합.

3. 시사점

■ 결의안 제10호에 투영된 주요 제조업 부문의 평균 국산화율 최대 50%와 1만 개 로컬 기업의 공급망 편입을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현지 한국 생산 법인들은 전례 없는 상생 의무를 지게 됨.

- 향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성과 연계형 우대 혜택과 특혜 조치 수혜 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 부품의 제3국 수입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
 - 현지 합작 법인(JV) 확대와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기업 내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임.
- 대기업들은 코어 기술 전수를 요구하는 베트남 정부의 요구와 한국 본사의 기술 안보 기조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음.
 - 핵심 공정기술과 지식재산권이 베트남 현지 협력사나 노동자에게 유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
-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의 정밀 가공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이 여전히 한국이나 중국 부품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현지 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제품의 최종 수율과 신뢰성이 동반 하락할 위험
 - 공급망을 짧은 기간에 재조정하려면 생산 및 조달 비용의 급증이 예상됨.

- 인센티브 지급에 '성과기반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지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공동 R&D 네트워크가 없거나 단순 저임금 조립 공정만 수행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공장 운영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
 - 투자금액에 비례하던 기존 방식에서 ESG, 에너지 효율 달성도, 고위 관리직 및 연구 인력의 현지인 채용 비율 등 실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의 비용 확대를 초래할 전망

■ 이러한 우려에도 한국기업은 더 이상 베트남을 저임금 기반의 단순 '우회 가공·조립 공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적 거점으로 재평가하고 있음.⁸⁾

- 다만 베트남 현지 한국기업은 결의안 제10호를 한국기업이 전개해 온 생산기술 첨단화 전략을 검증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최적의 기회로 삼을 필요
 - 한국 중소 수출입 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이었던 현지 복제품 양산 및 지식재산권(IPR) 분쟁과 관련한 보호조치의 수준을 베트남 당국이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므로 현지 투자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
 -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를 통해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IP 보호 체계 확립이 고품질 FDI 유치의 핵심 전제 조건임을 대내외에 공식화
 - MSCI 신흥시장으로의 지수 편입 계획을 공식 연동해 발표한 첫 전략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들의 베트남 간접투자 참여 기회를 확장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는 글로벌 기술 냉전 구도하에서 미국 및 서방 동맹국 주도의 공급망 다변화 기조에 베트남이 편승하려는 조치로도 해석 가능

- 2030년까지 신규 유치 자본의 75% 이상을 선진 경제국으로부터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고려할 때, 베트남 정부가 과도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경감하고 미국 및 유럽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적 차별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서방의 고부가가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저부가가치 자본 유입 비중을 인위적으로 희석하려는 고도의 쿼터 성격의 규제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 체계의 고도화 및 무역 위조와 원산지 우회 수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은 특정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단순 조립한 후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으로 라벨만 바꿔서 우회 수출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기능 가능
 - 이러한 리스크 관리 제도를 통해 베트남은 자국 경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서방의 관세 보복을 회피할 수 있지만, 가공무역 모델을 통해 우회 수출에 주력했던 일부 FDI 수출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
- 결의안 제10호에 따라 베트남이 국제금융센터(VIFC)를 설립한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대규모 제조 자본의 외환 유출입 관리권이 점진적으로 베트남 제도권 내부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음.

8) Lao Dong(2026. 7. 10.), "Macroeconomic stability, FDI and public investment support economic growth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ttps://news.laodong.vn/kinh-doanh/on-dinh-vi-mo-fdi-va-dau-tu-cong-nang-do-tang-truong-kinh-te-nua-cuoi-nam-1732729.ldo>.

- 베트남은 대규모 FDI를 유치했지만,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 관리와 금융 업무를 싱가포르 등 외부 금융 허브에 완전히 의존해 왔음.
- 독립적인 자본 운영 인프라 마련은 금융기관의 자본 이동 및 현지 통화 결제 루트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 베트남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에 대해 일본, 미국, 싱가포르는 FDI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 조치로 평가

- **[일본]** 선택적 FDI 유치 및 고부가가치 기술 이전 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표시
 - 주베트남일본기업인협회는 결의안 제10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지 당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⁹⁾
 - 베트남 미쓰비시 공사의 타쿠야 사하시 부사장은 결의안 제10호와 민간경제 부문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2025년 5월 4일자 결의안 제68호를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 꼽으며, 일본 제조 대기업들은 현지 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을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에 기여이 동참하겠다는 입장¹⁰⁾
 -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과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제조 환경에 편입되도록 직업훈련학교 전용 첨단 장비 기증, 정밀 기술 전수, 고성능 경영 솔루션 제공 등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공급망 상생 파트너십을 일관되게 심화할 전망
- **[싱가포르]** 고부가가치 금융 서비스 부문의 통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양적·질적 팽창에 깊은 관심을 표명¹¹⁾
 - 싱가포르는 베트남의 금융서비스 부문 팽창에 대해 인프라를 뺏기는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아세안 전체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기회로 봄.
 - 싱가포르 간 킴 용(GAN Kim Yong) 부총리는 베트남의 금융센터 설립을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싱가포르의 금융 운영 경험을 공유해 싱가포르와 베트남 IFC 간의 금융 연결(Connectivity)을 증진하겠다고 화답
- **[미국]** 베트남의 결의안 제10호는 고품질의 차세대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훌륭한 토대로써 긍정적이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¹²⁾
 - 단순히 유치한 자본의 규모를 넘어 첨단 기술, 혁신, R&D, 고속권 고용 창출 및 현지 기업과의 연계에 방점을 둔 결의안의 지향점을 높이 평가
 - 기술 이전과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투자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기업이 이미 베트남에서 기여해 온 가치를 반영한다고 공감
 - 미국의 직접투자는 단순 제조 능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제 표준 도입, 인적 자원 개발, 현대적 경영 방식 전수, 글로벌 공급망 통합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지향하므로, 결의안 제10호의 비전과 일치

9) Vietnam+(2026. 6. 30.), "Local authorities, FDI businesses propose measures to advance foreign-invested economic sector," <https://en.vietnamplus.vn/local-authorities-fdi-businesses-propose-measures-to-advance-foreign-invested-economic-sector-post347472.vnp>.

10) Vietnam.Vn(2026. 6. 30.), "Nghị quyết số 10-NQ/TW: Thay đổi tư duy từ 'thu hút' sang 'kiến tạo'," <https://www.vietnam.vn/nghi-quyet-so-10-nq-tw-thay-doi-tu-duy-tu-thu-hut-sang-kien-tao>.

11) Vietnam.Vn(2026. 1. 12.),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 중심지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https://www.vietnam.vn/ko/viet-nam-singapore-tang-cuong-hop-tac-nham-phat-trien-trung-tam-tai-chinh-quoc-te>.

12) Vietnam.Vn(2026. 7. 4.), "AmCham Vietnam: Resolution 10 opens opportunities for Vietnam to attract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capital," <https://www.vietnam.vn/en/amcham-viet-nam-nghi-quyet-10-mo-ra-co-hoi-de-viet-nam-thu-hut-dong-von-dau-tu-the-he-moi>.

■ 다만,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에 드러난 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모습에 대해 한국기업은 여전히 우려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합작법인 설립 강요, 국산화율 규제의 무기화, 불투명한 행정 재량 가동, 핵심 데이터 및 소스코드 로컬화 등일 것임.
 - 합작법인 설립을 강요하여 단독 법인 형태의 진출을 막고, 현지 국유기업이나 당이 지정한 파트너와 50% 미만의 지분 상한을 둔 합작을 강제하여 기술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분할해 갈 경우
 - 국산화율 요건(최대 50%)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단순 세제 혜택 취소를 넘어 공장 가동 중단이나 기존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대규모로 환수하는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경우
 - 명확한 기준 없이 현지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진행하거나, 환경·소방 인허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FDI 기업을 관리하려고 할 경우
 - 특정 하이테크 공정이나 소프트웨어의 원천 소스코드를 베트남 내 로컬 서버에 강제 저장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술 유출 위험을 극대화할 경우
- 그러나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강제 기술 이전 체제로 폭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다자간 국제 통상 규범의 제도적 준수]** 베트남은 이미 WTO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VFTA(유럽연합-베트남 FTA)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투자 보호 조항이 포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로 인한 협상 레버리지 한계]** 베트남은 내수 중심국이 아니라 ‘글로벌 우회 수출지’로서 매력적인 곳이므로, FDI 기업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독점적 시장 레버리지가 존재하지 않음.
 - **[치열한 FDI 유치 경쟁]**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아세안 경쟁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멕시코가 거대한 인센티브를 무기로 FDI 기업을 유혹
 - **[기술 파급 역량의 구조적 부재]** 베트남 토착 중소기업들이 외국의 첨단 기술을 강제로 넘겨받아도, 이를 소화할 만한 자체 엔지니어링 역량과 기초 체력이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음.¹³⁾
 - **[극단적인 FDI 수출의존도]** 중장기 거시 목표(2025~3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이상)는 외국인 투자 없이는 단 한 분기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

■ 그럼에도 공산당 1당 체제의 속성상 정치적 기류 변화의 리스크를 100%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 지표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국의 기술 표준을 베트남이 따라오도록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정치 체제와 베트남 경제의 역량을 고려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아래 5개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지정학적 정도 정도]** 미·중 패권경쟁하에 어느 쪽으로 더 심하게 정도되는지 면밀한 확인
 - **[단일국 자본 과점]** 중국계 FDI 유치 총액이 한국을 추월하여 베트남 내 단일 최대 투자국 지위를 확보할 경우
 - **[정치 거버넌스 변화]**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서 실용주의 경제 관료 그룹이 실각하고, 민족주의 및 공안·강경파가 핵심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
 - **[로컬 대체제의 등장]** 빈패스트나 빈스마트 같은 베트남 로컬 대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임계점을 넘어

13) 켄 외(2026)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전체 FDI 기업 중 고도화된 첨단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단 5%에 불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체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시점

- **[다자 통상조약 구속력 상실]** 미국의 고립주의 기조 강화로 인하여 CPTPP나 EVFTA 등 베트남을 역제 하던 다자간 통상협정의 구속력이 와해되거나 해체되는 경우
- 현 수준에서 위 5개 지표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강압적인 기술 탈취국이나 자산 통제국으로 돌변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지만, 적극적인 성과 연계형 유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으므로 베트남 하이테크 공급망이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베트남 정부가 결의안 10호에서 천명한 방향성은 “과거처럼 생산요소만 공급하고 혜택만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하지만, 다자간 규범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술을 교류하는 기업에는 합법적인 보조금을 주겠다”는 성과 연계형 유인책으로 보임.

■ 한국의 기술 표준이 베트남 하이테크 공급망의 표준이 되도록 현지 R&D 센터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양국의 지식 관료 및 연구진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

- 차세대 핵심 지식 관료들과 연구진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한-베 하이테크 포럼’을 형성하고 하이테크 신임 엘리트층을 포섭
- 하노이 국립대학 등 현지 최고 명문 교육기관 내에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AI 설계, 친환경 모빌리티 전공 학과를 개설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 베트남 정부의 ‘2030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 5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의 사내 교육 인프라와 연계하고, 졸업생 중 우수한 A급 하이테크 인재를 한국 공급망 내부로 조기에 흡수하는 인재 선점 체계를 구축

■ 베트남 정부에 ‘부품 동반성장형 규제 샌드박스’를 제안하여 한-베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베트남 국내 1차 공급업체 1만 개 이상 육성과 부품 국산화율 50%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응

- 베트남 중소 제조 법인 중 정밀 화학이나 특수 소재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독자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중견 소재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한-베 부품·소재 조인트벤처를 육성
- 설립된 합작회사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45~50% 국산화율 규제를 합법적으로 우회
- 설립된 합작법인들의 제품을 아세안 역내의 신규 표준 부품으로 등록함으로써, 한국 기술 표준에 베트남뿐 아니라 아세안 전체 하이테크 가치사슬의 뿌리를 묶어두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고착화

■ 만일 더욱 기술 이전 압박을 강화하고, 행정 재량을 통해 세무 검증 수준의 강도를 높일 경우에는 기술의 모듈화 수준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지역을 ‘베트남+1’ 전략 대상으로 활용하는 헤징 전략을 추진

- 핵심 IP 및 설계 소스코드의 단계별 블랙박스화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환수 적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베트남+1’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생산 물량 일부를 타 아세안 국가로 분산하려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탐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KIEP**